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9/ 8 통권 153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포터블 CEO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의 증여세와 양
도소득세 과세방법(소득세법 제101조)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새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
내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하
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
연법인세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지급
시, 배당소득 해당 안됨 (p.13)

< 법인주식, 지분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 · 12호 :
개정전 경과규정, 금융투자소득과세 규정들 2년 유예) >

구분	주주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	적용세율	세부규정
국내 기업	소액 주주	중소기업 (세법상)	상장주식 장내거래	0%(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상장주식 장외거래	10%	11호 나목 1)
			비상장법인	10%	"
	대 주 주	중소기업 아닌 경우	상장주식 장내거래	0%(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상장주식 장외거래	20%	11호 나목 2)
			상장(장내, 장외), 비상장주, 1년 이상 보유	과표 3억이하 20% 3억 초과부터 25%	11호 가목 2)
외국 기업	중소기업	1년 미만 보유	30%	11호 가목 1)	
		국내 중소기업의 국외상장주	10%	12호 가목	
외국 기업	비중소기업		외국설립기업 주식 모두임	20%	12호 나목
	각종 파생상품(펀드)		국내외 모두	20%	13호

※대주주 = 주주+특관자 비율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주식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임

※대주주 = 주주+특관자 비율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주식시가총액 10
억원 이상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35 호 / 주간 36호

2021. 9. 8.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과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주식, 지분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12호: 개정 전 경과규정, 금융투자소득과세 2년 유예)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소득세법 제101조)	2
C E O 에 세 이	포터블 CEO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관련 문의 - 임대기간 중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공급가액 안분 방법(면세) - 소득세, 주민세 임대사업장 단위과세 여부 - 유형자산 취득 시 수선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새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지출 시기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의 종류 -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10 11
직 장 인 Survival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 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5269, 2021.01.15) -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임 (지방세정책과-236, 2021.01.15)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세금채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지급시, 배당소득 해당 안됨	13
세 무 정 보	-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 영방안	16 23
회 계 정 보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9

배우자 · 자녀에게 특수관계자 통해 증여한 부동산 등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소득세법 제101조)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당초취득가 5억원, 공시가 · 기준시가 10억원,
최종양도가 15억원인 경우, 보유기간 10년>

증여관계	양도소득세	증여세	최종합계세금
본인 직접양도	양도차익 10억원의 양도세 양도소득 15억 - 5억 - 장기 보유공제(20%) = 8억 : 양 도세 3억 × 1.1 = 3.3억원	양도 후 현금증여 시 15억 - 3.3억 = 11.7억원 증여세 = 3.0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최종 현금 : 8.62억원 • 양도세 + 증여세 = 6.38억원
가족의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양도간주 양도세 3.3억 • 수증자의 양도세 : 15억 - 10억 - 5억 × 4년 × 2% = 4.6억의 양도세 1.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증여세 2.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2.4억 + 양도세 1.58억원 = 3.98억이 본인의 직접양도세 3.3억원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인정됨
가족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 후 4년 후 양도	수증자(특수관계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58억원	10억 증여세 2.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합계세액 : 3.98억원임(1.58+2.4) • 양도대금의 소유권도 불분명, 증여세 문제 남음

배우자 증여후 5년 내 양도	수증받은 배우자 양도 $15\text{억} - 10\text{억} - 5\text{억} \times 4\text{년} \times 2\% = 4.6\text{억원}$ 의 양도세 1.58억원	① 10억 증여 - 6억 배우자공제 = 4억 증여세는 7천만원 ② 배우자의 향후 자 녀증여세 별도임	① 세금합계 7천만원 +1.58억원=2.28억원 ② 배우자의 자녀 증여 12.72억원의 증여세 3.48억원이 추가될 수 있음(최종세금은 5.76억)
자녀 증여후 5년 내 양도	수증받은 자녀의 양도 15억 - 10억 - 5억 $\times 4\text{년} \times 2\% =$ 4.6억원의 양도세 1.58억원	• 10억 증여 - 자 녀 공제 5천만원 = 9.5억의 증여세는 2.25억원	• 세금합계 2.25억원 +1.58억원 = 3.83억원 (가장 적은 세금)
결론	소유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후 5년 내 우회양도함(3.98억원)보다 자녀에게 분산증여 후 양도(3.83억원)가 가장 적은 세금임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포터블 CEO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기업 회생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항상 혁신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강한 기업을 더욱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그것 역시 광의의 '회생경영'이라 할 수 있다.

실업수당과 연금 그리고 재취업 프로그램의 작동등 아직까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게 준비되지 못한 한국실정에서는 실업에 따른 당황과 고통이 심각하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퇴출도 실업에 따른 충격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부실기업은 결국 실업을 낳고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평소부터 부실기업 문제에 필자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 물론 퇴직후 오랜 세월 후였지만 필자가 근무했던 회사 두 곳이 쓰러지는 것을 관찰하게 된것도 관심을 갖게된 동기였다.

기업도 인생처럼 생로병사가 있음을 실감했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반면에 혁신적 치료를 통해 회생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반면교사(反面教師)이기 때문이다.

자구노력 없이 도덕적해이에 빠진 부실기업은 가차없이 버려지되 회생 가능한 기업에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기업이란 죽어가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법정관리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등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과 법정관리를 갓 벗어난 기업(Orphan Company)도 포함된다.

부실기업 대처방안은 여러가지다. 개념을 확대해보면 M&A도 있고 회사형투신(Mutual Fund)도 있다. 부실채권 처리방안으로 대출금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나 벌처펀드(Vulture Fund)도 있다. LG가 미국에서 인수했으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제니스를 회생시킨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업회생)회사의 구조조정 경영혁신도 있다.

기업의 재건에는 자금 못지않게 사람, 즉 프로기업재건 경영자인 포터블CEO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법정관리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경영이 호전되는 경우는 극히 저조하다. 법정관리인이 과연 CEO다운 보상과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황폐한 기업내외환경을 극복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당초 달성 불가능한 '뺨튀기' 정리계획하에 법정관리기업으로 피신시킨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도덕적해이와 실패한 오너가 만든 기업문화와 지속적 간섭의 잔존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과 변신의 어려움 등이 있다.

따라서 첫째, 법정관리업체로 인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잔존가치와 청산가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또 정리계획이행 가능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둘째, 실패한 오너나 경영진의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대형건설사인 D 건설의 경우처럼 회생경영에 쓸데없이 뒷다리를 잡을수 있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 호시탐탐 경영권회복을 노리는 지뢰밭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노력과 자질이 투철한 관리인 즉 프로기업재건경영자인 포터블 CEO의 선정이다. 과거와 같이 채권단에서 파견한 은행원이나 퇴직 관료 출신들이 작은 보수나마 만족하고 요행수나 기다리면서 세월보내는 자리로 전락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국같은 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회사의 등장과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포터블CEO의 자생을 뒷받침해야 한다. 보상도 뚜렷하려니와 경영정상화에 걸맞은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톰 피터스의 지적처럼 CEO는 동시에 CDO(Chief Destruction Officer)여야 한다. 즉 쌓는것(Build-up)못지않게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포터블 CEO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관련 문의

Q

6월 14일 거래처에서 당사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작성일자 6월14일 세금계산서 발행
2. 작성일자 6월14일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1번 세금계산서 취소
3. 작성일자 5월14일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그렇다면 3번 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6월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가산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사유일 등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 수정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공급시기가 5월14일인데 6월14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후 재발급하는 경우는 애초에 정상적인 공급시기인 5월14일에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기간 중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공급가액 안분 방법(면세)

Q

[사실관계]

1. 당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임
2. 정부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해 해당(면세)
3. 반기별로 총공급가액(기부채납가액)을 계약기간인 360개월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4. 2020년 12월 22일 관리운영기간 연장 계약 체결(+15년, 공급가액 변동 없음)

[질의사항]

연장합의된 기간은 총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말 잔여 총공급가액('20년말 총공급가액 - '20년말 기발행공급가액 누계)을 2021년부터 연장된 기간까지 월할 안분하여 2021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A

공급가액의 변경없이 공급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2021년 상반기부터 연장된 기간까지 월할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임대사업장 단위과세 여부

Q 현재 부산, 광주, 대전 등 2개이상의 임대사업장이 있으며 각 지점별로 직원 1명씩 근무중입니다.
해당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신고시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 주민세(단위과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진행하는지와 그 방법을 안내부탁 드립니다.

A 1.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본사에게 지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사에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에 납부하면 되며,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 지점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지점사업장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되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도 주된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수선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Q 법인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시설물의 노후화로 욕실 및 싱크대 교체비용 등(인테리어 비용)을 수선비로 매도인에게 일부금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위 경우와 같이 일부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ex)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 후 비용으로 인식하는지요?

A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새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절세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신고와 관련된 세법을 잘 숙지하여 신고시에 누락시키거나 간과하지 않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몰라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세액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시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도 포함해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여야 함)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발행세액공제 적용받기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시에 잊지 말고 반드시 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신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휴업기간에 지출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에 발생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서면3탐-2893, 06.11.22)

따라서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여야겠다.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확인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납부의무면제자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드시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별도의 확인작업이 없어도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지출 시기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의 종류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조정 개편안

현행	개정안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35%)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득	대상	과세원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자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 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위에 속하지 않는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1.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어라

비교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항상 압박한다.

2.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당신의 인격으로 대항하라

감성이나 삶의 기쁨 같은 내적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인성은 더욱 더 드러나게 된다.

3. 감각 지각을 활성화시켜라

의식적으로 식사를 즐기고, 얼굴에 떨어지는 비를 느껴보라. 감각을 이용해 느끼는 그런 작은 경험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준다.

4.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운동을 한다.

5.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애의 첫 부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장단점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6.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연습하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긴장이 완화된 상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완화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7.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훨씬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도 훨씬 독립적이 될 것이다.

8.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라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라

거울 앞을 지나갈 때면 항상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보라.

10. 자기 내면의 소리와 접촉하라

어떤 형상이나 소리로 나타나는 자신의 가슴속에 울리는 따스한 감동으로도 나타나는 내면의 존재는 당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당신의 영혼의 길을 보여준다.

최 신 판 례 예 규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5269, 2021.01.15

질 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산정 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2019. 2. 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43, 2021.01.18

질 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지급시, 배당소득 해당 안됨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법령소득-115, 2021.01.22

질 의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규정에 따라 당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 “甲”과 “丙”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

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 1.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

[질의] 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284, 2021.02.17

■ 질 의

- A법인은 ◇◇사업청과 □□물품의 개발 및 납품에 대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조정하였고
 - 방위사업청은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최종 포함
- A법인은 당초 계약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 방위사업청의 최종 통보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법인은 ◇◇사업청이 감액 통보한 ○억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통상적으로 최종 정산통보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통보금액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

- A법인은 감액통보금액 중 일부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질의요지

-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일부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지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지급은 연말

오는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5일까지로 만일 지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1년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번 신청부터는 국세청에 보낸 모바일 안내문, 서면안내문의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집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추정 조건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된 것이다.

5대5 지분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개정 법안의 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공시가 10억5000만원(시가 15억원)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0억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는 14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법 개정 후 종부세는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율이 5대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함께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 들고, 5대5 지분의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국세청, 2021. 8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 '손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I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별이·맞별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별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별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홀별이 가구	맞별이 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0.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II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60세 미만) 또는 서면(60세 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 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하기)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 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III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②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붙임 2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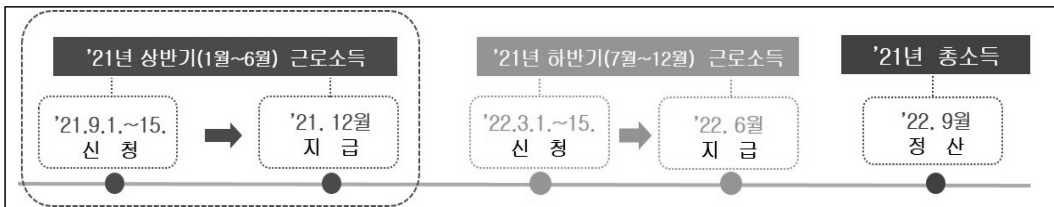
● 도입 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지급시점('22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 제도 개요

-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21. 9. 1.~15., '21년 하반기분: '22. 3. 1.~15.
- (신청자격) ① '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② '20.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지급·정산)
 - ①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②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 ③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1년 귀속) ↓



붙임 3 -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 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사례 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 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사례 4

9. 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붙임 4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1.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21. 9. 1. ~ 9. 15. (하반기분) '22. 3. 1. ~ 3. 15.	'22. 5. 1. ~ 5. 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21. 12월말 (하반기분) '22. 6월말 * 정산 : '22. 9월말	'22. 9월말
지급 금액	'21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¹⁾ , '22. 9월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21. 12월말) 35만 원 지급 ('22. 6월말) 35만 원 지급 ('22. 9월말) 30만 원 지급	('22. 9월말) 100만 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²⁾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2. 9월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세청, 2021. 8

II 주요 정책별 성과 및 하반기 계획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p>업무 여건</p>	<p>◆ 방역 등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상반기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 오던 경기 회복세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 강화 등으로 일시 주춤 * '21. 6월 현재 수출액 8개월, 고용 5개월 연속 증가, 경제심리지수는 7개월 만에 하락 전환(7월)</p> <p>◆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지속</p>				
<p>추진 방향</p>	<p>⇒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유념하면서 국민경제의 회복을 더욱 가속화</p> <table> <tr> <td data-bbox="275 1275 504 1452"> <p>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p> </td><td data-bbox="518 1275 1222 1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td></tr> <tr> <td data-bbox="275 1458 504 1648"> <p>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세정운영</p> </td><td data-bbox="518 1458 1222 1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 제도 운영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td></tr> </table>	<p>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p>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세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 제도 운영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p>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p>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세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 제도 운영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가. 상반기 성과****① 코로나19를 감안한 세무검증 부담 감축 방안 적극 추진**

- 연간 세무조사 감축 운영 방안을 연초에 확정 발표하고,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을 대폭 축소
- 중소기업자가 대상인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지침 마련
- 모범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② 한국판 뉴딜 등 일자리창출과 혁신 지원 체계 구축

- 전국 130개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뉴딜 기업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 본·지방청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 혁신·뉴딜지원분과를 신설하고, 뉴딜 관련 분야의 종사자·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 영세한 혁신·창업기업을 재능기부 형식의 세무·회계사('나눔세무·회계사')와 연결하는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포털·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개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안내서」 발간
 - * (활용사례)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를 '오픈 API' 방식 제공 →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지원

나. 하반기 계획**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기존 조치와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
-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 본격 구축

〈 피해 극복 · 경제 회복을 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구 분		대 상	정기 선정 제외	세무 조사 유예	신고 확인 제외
피해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			○
		◦ 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코로나 피 해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 [신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경제 회복 · 도약	일자리 안정 · 창출	◦ 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 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투자 확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	
		◦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스타트업 · 혁신	◦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		
		◦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개인 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 수입금액 1천억원(개인 2백억원) 이하	○	○	
		◦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

②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 운영·개선



〈 일자리 창출 ·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현황('21년 하반기) 〉

구 분	대 상	세정지원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사업 직접 수행 중소기업 * 33개 정부부처에서 명단 수집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 · 매각 유예 ◦경정청구 즉시 처리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기준) 정기조사 선정 제외 기준과 동일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혁신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중소기업(중기부 선정) 스타트업기업(중기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경영 지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 (뉴딜·혁신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제외·유예(상세내용은 앞쪽 참조)

—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를 제고하여 세무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 * (중전) 상담신청 시 나눔 세무·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 지원
-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하여 산업 · 세수 등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 강화

③ 국세데이터 활용 ·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 (데이터산업)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 *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류산업)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 · 개선

【연구 지원】

- 연구 등 목적으로 누구나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 마련
-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노후소득 ·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 지원

(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가. 상반기 성과

❶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부가가치세 등 상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하여 광범위한 납세자에 자금 유동성 지원
 - 자금경색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업종과 기업에 대하여 압류·매각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직권 납부기한 연장]

- ▶ (부가가치세) '20.2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1개월)
- ▶ (종합소득세)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3개월)
- ▶ (법인세)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3개월)

[피해기업 지원 사례]

-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적 세정지원
- ▶ 경영위기를 겪는 주류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❷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세정 수행

-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장려금 수급요건과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 수행

- ▶ (재산요건) 주택가액과 간주전세금이 이중으로 합산되는 문제점 개선
- ▶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취지와 무관한 임대소득을 산정대상 소득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등 협업 강화

- ▶ 중기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에 매출·소득 등의 과세정보 제공
- ▶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

-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과액 업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준비 수행

* 특수고용직 관련 업종코드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세무대리인 등 현장의견 수렴 등



나. 하반기 계획

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
 - *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 *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 국세신고 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 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

②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 제도 운영

- 빠르고 효과적인 민생지원을 위해 '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8월 말 신속 지급
 -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 ARS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 제공
-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21.7월) 및 운영
 - * (기부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II (기부금단체)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
 - *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③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 하반기 시작되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 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
 -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 수행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업무 여건	◆ 사회구조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납세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빠르게 변화	
	◆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와 함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	
⇒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납세서비스 품질과 국민 참여 인프라를 고도화		
추진 방향	1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2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3 신규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1)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가. 상반기 성과

- ❶ 코로나19를 감안, 홈택스를 통해 향상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등 사설인증서로 로그인 방식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음성지원·화면확대 기능을 제공하는 등 홈택스 접근성을 대폭 향상
 -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안내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신고 도움 기능 확대

[신규 도입]

- ▶ 신고서 작성 및 납부까지의 절차·정보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 시행예정 개정세법을 반영, 향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미리계산 서비스 개발

[서비스 확대]

- ▶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 확대*
- * (기존)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추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 신고항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등, (양도소득세) 부동산 과세미달자 신고

▶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항목 확대

* (예) 수입금액 누락, 기납부세액 과다·부당 감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검증 등

② 성실납세를 돕는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상담 제공

- 주요 신고세목 별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

*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신고도움 화면을 통해 자료 제공

▶ (부가가치세) 업종·규모 등 특성별 자료 제공, 신종업종 사업자에게 별도 안내

* ('20년) 1월(88만 명), 4월(14만 명) → ('21년) 1월(97만 명), 4월(16만 명)

▶ (종합소득세)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 안내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정보 제공

* ('20년) 84만 명 → ('21년) 96만 명

▶ (법인세) 신고 누락 가능성 있는 중요정보 중심 제공, 소규모 법인은 모바일로 대표자 직접 안내

* ('20년) 23만 개 법인 → ('21년) 25만 개 법인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채팅상담, 안내책자* 발간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상담·안내 제공

*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21.3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배포('21.6월)

나. 하반기 계획

①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 (디자인)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
- (개인화) 신고·납부, 환급·채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

*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 (신고편의)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12월)

**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 (모바일)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 제고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부가세) 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②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

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

- 점자법 개정에 따라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 국세증명서·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증명의 금융기관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 지속

③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완료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 국세청 보유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

*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가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기능 별도 제공

▶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

* 국세청이 보유한 부동산·주식·이자·배당소득·채납내역 등

▶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 제공

④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

*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 가상자산 업종코드 신설 등

○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 강화

(2)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가. 상반기 성과

❶ 국민참여단 등 직접 참여·현장 지향적 소통 기반 마련



- 국민의 상시적·체계적 국세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분산 운영된 국민 참여 조직을 통합*한 「국민정책참여단」 신규 발족
 - * (서비스디자인) 舊 국민참여단, (홍보) 舊 특특기자단, (정책제안·평가) 민지단 외부위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3, 5월)하여 소상공인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 창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소통 노력* 지속
 - * (실적) 간담회 284회, 현장상담실 235회, 무료 세무 상담창구 742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최초로 개최(6월)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권익보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②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

- 권익보호 정보*를 안내하고 각종 민원 신청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권익보호 전용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구축
 - * 권익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위원회 심의·결정사례 등
-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소액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소액사전 신속처리제」 등 향상된 납세자 권익보호·권리구제 장치 마련
 - * 사후 평가 기능도 수행, 향후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활용
- 일부 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의견청취 대상 확대
 - * 탈세제보 등 비정기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연락두절 등
- 납세자보호 관련 조직과 제도의 변천 과정, 취지 등을 수록한 권익보호백서를 발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대내·외 이해 제고

나. 하반기 계획

①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국민참여정책')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

〈 '21년 주요 국민참여정책 선정 현황 〉

- ▶ (서비스개선)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세법령 개선 건의 등
- ▶ (납세자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
- ▶ (권익보호)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등

-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는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②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 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신규서비스 〉

구 분	내 용
신고납부	◦ 정부결정이 필요한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진행상황 안내
세무검증	◦ 부가·소득·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 관련 해명자료 제출·처리상태 등 안내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이후 사후관리 대상 자산, 진행현황, 유의사항 등 안내
권익보호	◦ 권익보호 민원처리 각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 ① 접수 - ② 주무부서 의견조회 - ③ 조사 및 집행 일시중지 요청 -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중 - ⑤ 심리자료 사전열람 중 - ⑥ 결과 통지

- 납세자 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 제공
-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
- * (종전) 사항별로 개별 시달한 업무 지침 활용 → (개선)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3)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①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 (개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1년)

- ①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21.1월부터, 기존 사업자는 '21.7월 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 8,000만 원 (부동산임대·과세유형장소는 4,800만 원)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21.1월부터)
 - 당해 연도 공급대가 3,000만 원 → 4,800만 원
- ③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21.7월부터)
 - 신규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제외

- (경과·계획) 간이과세 확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세액을 사전에 비교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프로그램 제공('21.6월)
 - 제도 개편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
 -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

②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 (개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22년)

- (경과·계획) 가상자산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강구
 - 거래자료 수집, 소득신고 지원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중

- ①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② (D/B 구축)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 ③ (소득신고)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 마련

* (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

-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업무 여건	◆ 경제 회복세 속에서 산업 간 양극화 현상 및 부동산 투기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포착 ◆ 사회 전반의 투명화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눈높이 또한 지속 상승	
	⇨ 청렴·공정한 공직자세를 견지하면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 필요	
추진 방향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가. 상반기 성과

- ①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적 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대응 강화
 -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고도 급증한 소득을 누락하는 신종·호황 분야* 조사

- *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업종별 업황 변화를 신속하게 도출
- 소득 은닉을 통한 고가자산 취득,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수입·재산 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실시

② 부동산 편법거래·기업이익 독식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 대처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 －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의 자금출처검증 등을 상시화하고, 증여주택은 당초 취득 및 증여 이후의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탈루행위 검증 강화
- 고액급여와 퇴직금, 부동산 내부 거래 등을 통한 불공정한 부의 이전 등 기업이익·재산증식 기회를 독식한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 정밀 검증 실시
 - －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재산급증 미성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 재산급증 미성년자 등 관리범위 확대, 세대 간 조기·변칙 증여 모니터링
- 국적 등 신분세탁을 통한 거주지국 위장,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기획조사 실시

③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등 적극적 추적 조사 실시

-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재산 은닉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 실시
 - － 전환사채 은닉, 사전증여 등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추적 조사 수행
-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 징수, 437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 확보
 - － 행정안전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징수 기관에 가상자산 강제징수 관련 업무 노하우 등 공유

나. 하반기 계획

①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 (조사)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 강력 대응
 - *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 (인프라) 정보공유·합동대응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공고화, 개선된 포상금 제도*를 통한 생활 속 탈세 제보 활성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 강화
 - * (상반기 개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시기 합리화



-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 등도 적극 발굴

②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 (조사)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
- (인프라)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 대응 강화
 -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을 분석하여 탈루혐의 검증
-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 제고
 - *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③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 (조사)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 정교화
 - 고액의 전세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 고액 전세금 승계 후 미상환·대리상환,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 등
- (인프라)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추진

④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 (추적) 채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근거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
 - * (요건)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등
- (인프라)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 모형 고도화를 통해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 *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업무 자동화 및 압류 장기화 차단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가. 상반기 성과

- ① 능동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기능 운영
 -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문제발생 예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문제해결 중심의 감사기능 강화
- ② 과세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법률지원 제공
 - 메신저를 통한 법률자문 제공, 조세소송사례집 법령정보시스템 게재, 경력별 과세품질 교육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적법과세 지원체계 운영

- ▶ (메신저 법률자문) 일선 직원이 내부용 메신저로 법률자문을 간단히 신청·회신
- ▶ (과세품질교육) 신규직원 대상 기초교육, 경력직원 대상 심화교육 운영

나. 하반기 계획

- ①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신규직원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 대상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생애 전 단계에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 －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 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 노력 지속
 - 적극적 업무추진 우수사례 창출은 우대,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 구축
- ②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 과세사실판단·기준(법령해석) 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편화*
 - * 사실판단·기준자문 간 착오 신청시 (종전) 반려 후 재신청 → (개선) 소관 변경하여 자문 제공
 - －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대폭 확대(분기별 → 격월)
 - 세법 관련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 강화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업무 여건	<p>◆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국세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마련 시급</p> <p>◆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p>	
	⇒ 온 직원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세청 구축	
추진 방향	<p>1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p>	<p>■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청 미래전략 논의</p> <p>■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 세정 선도</p>
	<p>2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p>	<p>■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p> <p>■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돕는 인사 운영</p> <p>■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일터 조성</p>

(1)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가. 진행상황

- ① [비전설정·과제선정] 내·외부 소통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적시성에 따라 국세청이 나아갈 3대 비전, 12대 전략과제 선정

미래전략 추진단 12대 전략과제

비 전	전략과제
국민 우선 국세청	① 비대면시대 신고 방식의 발전적 개편
	②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방안
	③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변화에 강한 국세청	④ 신종산업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⑤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평가업무 개선
	⑥ 세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통계분석 연구기능 강화
	⑦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전략적 도입 방안
	⑧ 과학적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관리 방안
	⑨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 분야 개편
일할 맛 나는 국세청	⑩ 보이스봇 중심 AI기술의 국세행정 접목 방안
	⑪ 국세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⑫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 ② [연구수행]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등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전략과제별 연구팀을 구성 후, 납세자 대상 설문 및 해외사례·선행연구 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진행

나. 하반기 계획

- 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청 미래전략 논의
- 국세청 미래 비전·역할, 로드맵(Road Map)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 제시
 - 전략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책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미래전략의 공론화 및 숙의 과정 수행
 - * 중요성이 높은 미래전략을 포럼 논의주제로 선정 및 토론
- ②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 세정 선도
-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의 추진동력 강화
 - 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하여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이행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7일 (금)	8월 30일 (월)	8월 31일 (화)	9월 1일 (수)	9월 2일 (목)
미 달 러 (USD)	1168.10	1170.80	1164.40	1162.80	1157.50
일 본 엔 (JPY)	1061.47	1065.87	1058.88	1057.04	1051.84
영 국 파 운 드 (GBP)	1600.65	1611.49	1602.16	1599.26	1593.94
캐 나 다 달 러 (CAD)	921.00	928.25	923.83	921.50	917.12
홍 콩 달 러 (HKD)	150.00	150.34	149.53	149.49	148.84
위 안 화 (CNH)	180.56	180.50	180.09	179.97	179.17
유 로 화 (EUR)	1373.39	1381.31	1373.70	1373.27	1370.77
호 주 달 러 (AUD)	846.11	855.91	849.37	850.88	852.79
싱 가 폴 달 러 (SGD)	862.61	869.93	865.50	864.73	860.7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45	279.43	280.11	279.72	278.66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

— 한국회계기준원, 2021. 8

I IASB의 IAS 12 개정 배경

- (배경)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
 - 이 회계처리에 실무적 다양성(이연법인세의 인식, 미인식)이 발견됨에 따라 '19년 7월 IASB는 IAS 12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 21년 5월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각각 회계처리하는 내용의 IAS 12 개정을 발표함

II K-IFRS 제1012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1)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 문단 15·24

- ❶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❷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여부에 다양한 실무*가 존재하였음
 - * IFRS 해석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지 않거나,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충액 표시, 순액 표시)가 모두 있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24의 단서(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

외규정)에 (요건 ❸)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함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K-IFRS 1012 문단15·24 단서)〉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개정 전	개정 후
(요건 ❶)	사업결합이 아님	
(요건 ❷)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건 ❸)	-	<u>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u>

- (요건 ❶)과 (요건 ❷)를 충족하는 거래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인식하고 관련 자산(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재무제표 투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인식하지 않도록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BC78),
-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하면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투명성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도록 함(BC79)

〈사례1〉 개정 내용 적용

1. 복구충당부채 관련

개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복구충당부채(100)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 (복구충당부채는 복구비용을 지출할 때 세무상 공제되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세무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 적용세율 20%)

(1) 복구 의무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	(대) 복구충당부채	100
----------	-----	------------	-----

(2) 개정내용 적용: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재무제표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음)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2. 리스 관련

건물을 임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100)와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을 인



식한 경우 (사용권자산은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며, 리스부채는 리스기간에 걸쳐 세무상 공제 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 적용세율 20%)

(1) 리스 회계처리

(차) 사용권자산 100 (대) 리스부채 100

(2) 개정내용 적용: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재무제표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음)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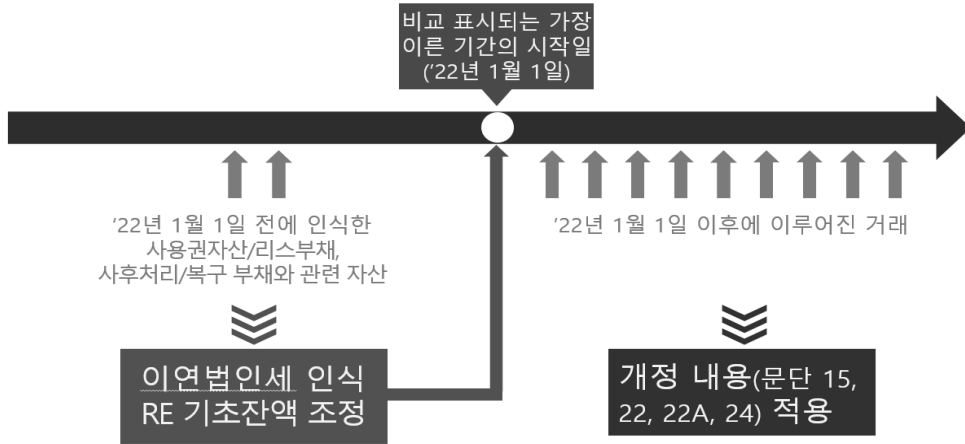
□ (경과규정)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그 밖의 거래를 구분하여 적용

구 분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전에 발생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98L	98K
그 밖의 거래	해당 사항 없음	98K

- (문단 98L)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22.1.1.)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

→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 (문단 98K) 개정 내용(문단 15, 22, 22A, 24) 적용



III K-IFRS 제1012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확보
 - * 그 결과,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유효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소됨
- 과거 리스 기준(K-IFRS 1017 '리스', 2018년까지 적용)의 운용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대상인 거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김)해야 하므로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기업은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과거 리스 기준의 금융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대상인 거래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관련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아 실무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또 대규모 장차산업이나 오염 유발 업종 등, 건물을 임차하여 사후처리·복구 의무가 있는 기업(충당부채 계상하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중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이번 개정으로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IV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V 번역 대안 선택

- 공개초안에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된 '상한 제안(Capping proposal)' 과 관련된 결론



도출근거 문단 BC83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번역안 중 대안 1(의역)을 선택함

- '상한 제안' 은 주로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이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전제로 제안된 것으로 보이나 직역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움

원문	To address this situation,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that the recognition exemption continue to apply <u>to the extent that an entity would otherwise recognise unequal amounts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u> (the capping proposal). ...
대안 1 (의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공개하였을 때, <u>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에는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u> (이하 '상한 제안'이라 한다). ...
대안 2 (직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공개하였을 때, <u>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정도까지</u> 인식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상한 제안'이라 한다). ..

VI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VII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VIII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12 개정 발표(시행일 2023. 1. 1.)	'21년 5월 7일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1년 8월 27일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21년 8월 31일 ~ 9월 29일
K-IFRS 제1012호 개정안 심의·의결	'21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보고	'21년 4분기 중
공표	'21년 말

참고 - IASB가 발표한 IAS 12 개정 공개초안('19.7)과 개정안('21.5)의 차이

1. '적용 사례' 추가 📖 사례 8

□ '리스' 사례를 추가하여 개정 내용의 적용 방법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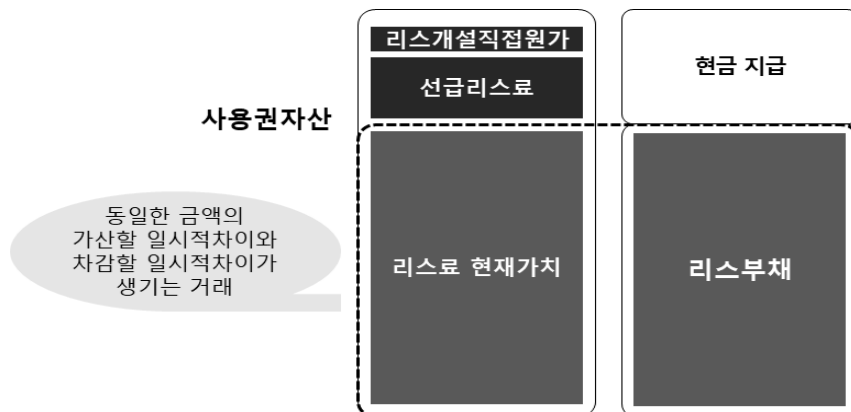
- 건물을 5년간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함
- 매년 리스료: 100원, 연말 지급
-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5%
- 최초 인식시점 리스부채 현재가치: 435원
- 리스개시일 선급리스료: 15원
- 리스개설직접원가: 5원
- 최초 인식시점 사용권자산 원가: 455원(435+15+5)
- 적용세율: 20%

○ (적용되는 세법 고려) 세법상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세무상 공제 → 사례에서 세무상 공제는 리스부채의 상황에 관련된다고 결론내림

* 세무상 공제가 사용권자산에 관련(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 대해 세무상 공제됨)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 기준액과 장부금액은 동일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 않음

○ (산정된 일시적 차이에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규정 적용 여부 검토)

구분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선급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부채 상응 사용권자산
(요건 ①)	사업결합 거래가 아님	○	○
(요건 ②)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요건 ③)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	×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규정 적용 여부		×	×





- (이연법인세 요약) 사례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최초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사용권자산				
선급리스료	15	- *1	(15)	(3)
리스개설직접원가	5	- *1	(5)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435	- *2	(435)	(87)
리스부채	435	- *3	435	87

*1 자산의 세무기준액: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세무상 차감될 금액(문단 7) = 0

*2 자산의 세무기준액: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세무상 차감될 금액(문단 7) = 0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는 리스부채의 상황과 관련됨)

*3 부채의 세무기준액: 장부금액 - 미래 세무상 공제될 금액(문단 8) = 435 - 435 = 0

<추가 분석> 현행 법인세법에 따른 적용 사례 검토

□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구 분		K-IFRS 제1116호	법인세법	
			금융리스	금융리스 외
사 용 권 자 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제1116호 문단 24, 31)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영 제24조⑤)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자산 (영 제24조⑤)
	리스개설 직접원가		지출 시점에 손금산입	
	선급리스료			
리스료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황 (제1116호 문단 36)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제외) (시행규칙 제35조①)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 산입(리스개설직접원가는 제외) (시행규칙 제35조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477(2020.06.10.) 내용과 일부 세무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작성함

○ (적용 세법 검토)

- (금융리스 외) 사용권자산 중 리스부채 최초측정금액 해당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 산입 → 세무상 공제는 리스부채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판단

- (금융리스) 사용권자산 중 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 해당 부분은 손금 인정(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임)되며, 리스료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세무상 공제는 리스자산과 관련된다고 판단
- (선급리스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 산입되거나 결과는 같으므로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관련된다고 판단
-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 여부)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서 기준서 사례와 비교할 때, 선급리스료가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음

2. 상한 제안(Capping proposal) 삭제 ☞ BC82 ~ BC87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더라도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①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적용되는 회수 가능성 요건*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일부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IAS 12 문단 24)
 -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 ②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19년 7월 IASB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외에는(예: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는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이하, 상한 제안) 하였으나
 -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 요건을 검토하여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IASB 개정 공개초안 문단 22A)
 - '21년 5월 IASB 개정 기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한 제안을 삭제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문단 22(2))
 - 상한을 두는 것은 IAS 12의 일반 원칙(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과 비일관됨
 - 상한은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움

<사례2> 공개초안의 상한 제안(삭제됨)과 개정안 비교

리스부채 최초 인식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100원이 생겼으나 회수 가능성 요건 검토 결과, 차감할 일시적차이 70원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이 인식함

■ '19년 7월 IAS 12 개정 공개초안

이연법인세 회수 가능성 요건과 상한 제안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동일한 금액



(14원)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리스부채	30	70	차감할 일시적차이 70원 × 법인세율 20% = 14 이연법인세자산 14원
사용권자산	30	70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원 × 법인세율 20% = 20 → 상한: 이연법인세부채 14원만 인식

■ '21년 5월 IAS 12 개정 기준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수 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14원만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는 20원을 모두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이 6원 발생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리스부채	30	70	차감할 일시적차이 70원 × 법인세율 20% = 14 이연법인세자산 14원
사용권자산		100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원 × 법인세율 20% = 20 이연법인세부채 20원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6원 인식